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專門委員 檢討報告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5년 2월 7일
- 회부일자 : 2005년 2월 11일

제안 이유

- 재난방재조직 보강과 혁신분권 전담부서 변동에 따라 실·국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 명칭 변경
 - 건설교통국 ⇒ 건설방재국
- 분장사무 조정
 -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등에 관한 사항(기획관리실⇒자치행정국)
 - 정보통신 및 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자치행정국⇒기획관리실)
 - 민방위에 관한 사항 (자치행정국⇒건설방재국)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과대조직 정비와 재난방재조직 보강, 그리고 혁신분권 전담부서 변동 등에 따라 실·국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①신 설

- 과신설 : 재난관리과(총괄담당, 대책담당, 복구담당, 지원담당)
- 담당(팀)신설 : 과표담당, 혁신지원팀, 역사규명담당

②분리 및 통폐합

- 세무회계과 ⇒ 세정과, 회계과
- 민방위과+안전관리과 ⇒ 민방위안전관리과

③기능이관

- 혁신분권담당관 : 기획관리실 ⇒ 자치행정국
- 정보통신과 : 자치행정국 ⇒ 기획관리실
- 민방위과 : 자치행정국 ⇒ 건설방재국

○ 먼저 재난방재 전담조직 개편으로는

- “건설교통국”을 『건설방재국』으로 명칭변경하고,
- 민방위과를 건설방재국으로 이관하면서 안전관리과와 통합하여 『민방위안전관리과(민방위담당, 안전점검담당, 하천계획담당, 하천시설담당, 경보통제담당)』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 혁신분권 전담기구의 개편내용은

- 시·군 혁신에 대한 도 본청의 지원·총괄기능 수행을 감안하여 혁신분권담당관실을 “기획관리실”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조정 하되,
- 업무성격에 맞도록 교육지원팀은 “기획관리실”로, 균형발전팀은 “경제과”로 이관하고, 시·군 지원·총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지원팀』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지방세정 기능보장, 동학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인력 보강, 그리고 과대조직 기능조정으로는

- 자치행정과내에 역사규명담당을 신설하여 동학혁명 및 일제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업무를 전담하고,
 - 과대조직인 세무회계과를 “세정과(4담당)”와 “회계과(5담당)”으로 분리하면서 세정과에 주택가격제도 시행을 전담할 『과표담당』 신설과 총무과의 청사시설담당을 회계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 따라서 원활한 업무추진과 업무 효율성 증진 등을 위한 실·국명칭과 분장사무의 조정내용을 담은 본 조례의 개정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 다만, 행정혁신과 지방분권 업무는 참여정부가 비중있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로서, 도지사를 비롯한 고위간부들이 인내심을 갖고 꾸준한 관심과 변화의 노력 등이 뒷받침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런 측면에서 혁신전담기구를 기획관리실(2급)에서 자치행정국(3급)으로 이관하는 것은 오히려 업무추진에 대한 가속도내지 탄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보충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되며,
- 행정수요가 확대 또는 감소로 조직정비가 필요한 부서에 대한 조직 진단없이 새로운 행정수요에 의한 필요기구만을 신설하려는 이유와 신설기구업무중 동학혁명과 일제강제동원 피해규명 관련 업무는 일사불란한 추진과 소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에서 처리하도록 일원화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됩니다.

- 아울러 과대조직 정비차원에서 세무회계과는 “세정과”와 “회계과”로 분리하면서도 조직이 가장 비대하다고 할 수 있는 자치행정과는 아무런 조정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끝으로 조례안 부칙으로 개정돼야할 조례중 "충청북도 의회 위원회 조례"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안 개정시에는 보다 세밀하고 치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붙 임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